여성정책 국내동향

2026년 10월 2차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Korean Women's Development Institute

주요 현안

성평등가족부,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

성평등가족부는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각급 학교 등 1만 8,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'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'를 발표했. 발표에 따르면, 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.9%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, 교육 부진기관은 전년보다 감소했.

* 실시율(대상기관 개수): ('23) 99.9%(18,177개) → ('24) 99.9%(18,226개) → ('25) 99.9%(18,308개)

-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등에 따라 공공부문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예방교육 체계 구축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각 기관이 예방교육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함.

참고자료

-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, 2026. 10. 22.] 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58&bbsSn=711484

성평등가족부, 청년들이 고른 '모두의 성평등정책' 우선과제는?

- 성평등가족부는 "모두의 성평등 : 청년이 생각하는 성평등정책, 어디까지?"를 주제로 제2차 「청년세대 성별균형 공개형 공론장」을 개최함.
- 참가자들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, 찬반충돌 양쪽에서 마음건강·가족책임 균형부 등 5개 세대를 통해 각 문제에 성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, 성평등정책과 관련 정책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봄.
- 사례별 분단 결과, ▲양쪽의 우려충족 ▲성평등정책이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응답이 49.4%로 가장 많았고, ▲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 ▲성평등정책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.2%로 가장 많았음.
- 반면, ▲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배치'(46.9%), ▲'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'(43.2%), ▲'군복무의 시간'(45.0%)은 다른 정책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관점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, 성평등정책의 역할과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사례별로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났음.

참고자료

-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, 2026. 10. 25.] 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58&bbsSn=711487

성평등가족부,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

- 성평등가족부는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,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힘.
- 이번 조치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제3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,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 조치하기 위해 추진됨.
- 또한,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 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추진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.

참고자료

-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, 2026. 10. 26.] 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58&bbsSn=711488

「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('26~'30년), 제46회 국무회의 심의·의결을 확정

- 정부는 10월 27일(화)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「제1차 국가 인구전략 기본계획('26~'30년)」을 심의·의결하여 확정함.
-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"세대와 경계를 넘어, 함께 모이는 대한민국"을 비전으로, '개인의 삶의 질 제고'와 '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'를 양대 목표로 설정, 이를 실현하기 위해 '인화·직장·도약'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청년 생애주장 지원, 출·육아 부담 완화, 출생률 하락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정책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인구전략위원회는 금번 확정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, 과제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.

참고자료

-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, 2026. 10. 27.] https://www.betterfuture.go.kr/home/kor/M922935586/board.do?deleteAt=N&act=detail&idx=cb00d1d0008e85e71d41b8741bcbf9a5f72cd8bc896ee63779e4c523dd0b&searchValue1=06&searchKeyword=&pageIndex=1

성평등가족부,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

-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(목)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.
-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이어야 했으나,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지원 기회가 확대되며, 소득 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.
- '양육비 선지급제'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,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, 202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,514가구, 미성년 자녀 1만 3,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함.

참고자료

-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, 2026. 10. 29.] https://www.mogef.go.kr/nw/rpd/nw_rpd_s001d.do?mid=news40558&bbsSn=711486

국회의안정보시스템

출처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SitePage.do

구분	계류법안(일자순)	제안일	내용
가족·자율생	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)	2026.10.26	•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방점행을 신장하고, 강자정책 후 형사책임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 • 본인 등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위원회 등에서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 •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(안 제16조제2항 및 제27조)
	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(하종석의원 등 11인)	2026.10.23	•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며, 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신설)
	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하종석의원 등 11인)	2026.10.23	• 노인인권보고서 작성 시 노인 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신설)
	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	2026.10.26	• 양육비 채무 불이행 및 장기 미지급 등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 • 양육비 채무 불이행 및 장기 미지급 등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0인)
여성고용	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4인)	2026.10.16	• 고위직 임신이 아니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,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를 실질화하고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제19조제1항
	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재호의원 등 10인)	2026.10.20	• 공개는 같은 또는 공개수준만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,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를 실질화하고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한 제19조제1항
첨단특례	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	2026.10.14	•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에 정부영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•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
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	2026.10.26	• 식재치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제작·유포·반포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
양성평등	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	2026.10.14	• 정부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영향을 '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 기능을 신설하여 성평등 관련 의제 논의·심의 기구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성평등 의제의 종합적 조정 촉진과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및 • 또한 현행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, 성주류화 제도 정착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'성평등센터'로 지정 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 도모(안 제1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)
성주류화	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	2026.10.14	•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 정부영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•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범정부 성평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성주류화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 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는 바, 현행 중앙·지역 성평등 가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담체제로서 통합 운영하는 '성평등센터'가 성별영향평가기관 가능을 통합 지정할 수 있도록 '성별영향평가법」 시행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적 정합성 도모(안 제17조)

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도자료

일자리도 지역발전도... 국가 정책에 성평등 담아야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경숙)은 「다부처 중점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: 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」(책임 연구자: 김현정 연구위원)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함.
- 본 연구는 기존 성주류화 제도가 개별 사업 단위의 제한적인 개입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, 국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검정하는 개념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음.

참고자료

- 헤럴맙 2026. 10. 19.] https://www.kwdi.re.kr/plaza/bodd/view.do?p=1&dx=17349

• 연구결과/행사내용 관련

과제/행사명	날짜	매체명	제목	기사링크
성인지예산 2.0 선포식 및 전시회	2026.10.15	뉴스1	'도입 20년' 성인지 예산, 전체 3.1% 불과…한국여성정책, 범위 확대 선포	https://www.news1.kr/politics/assembly/6321560
	2026.10.15	여성신문	성인지예산 도입 20년…한국여성정책, '성인지예산 2.0' 선포식 개최	https://www.wome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83349
[연구보고서]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 방안 연구	2026.10.22	동아일보	손주 육아 육아하느라 집 팔기고 일 내려놓은 조부모들	https://weekly.donga.com/society/article/all/11/6421405/1
	2026.10.22	문화일보	손주 봐주는 노인, 일주일에 평균 27시간 맡는데… '할머니 우울증' [온나라 다함께 아이키우기 프로젝트]	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625316?ref=naver
	2026.10.24	파이낸셜뉴스	"엄마, 내일도 애 좀 봐줘" … 주 26시간 '공짜 노동'에 무너지는 부모님의 황혼 [선 넘는 사랑들]	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610241228252229
[연구보고서] 다부처 중점기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	2026.10.19	뉴스핌	국가 주요 정책 수립부터 성평등 반영해야…지역 일자리 창주 격차 제안	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61019000135
	2026.10.19	뉴시스	"일자리 지역발전 정책, 성개부터 성평등 관점 담아야"	https://www.newsis.com/view/NISX20261019_0003831434
[연구보고서] 친일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체화 연구	2026.10.18	연합뉴스	"친정엄마, 함흥육아 시키지 마라" 황보라에 자주…한국 조부모 '돌봄노동' 시간은 [이슈픽]	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16176100004?input=1195m

• 연구자 인터뷰

날짜	매체명	제목	관련 연구자	기사링크
2026.10.13	SBS뉴스	전원 까진 것도 몰랐다…'11살' 빈둥 노인 기해자	김정해 부연구위원	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8795657&plink=OFI&copier=NAVER
2026.10.14	SBS뉴스	접근금지 스마트워치도 못 막았다…피해자는 누굴 믿나		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8796255&plink=OFI&copier=NAVER
2026.10.15	한겨레	엔이은 여성살해, 피해자 못 지킨 국가…"고위험 가해자 격리해야"		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women/1282634.html
2026.10.23	헤럴드경제	'노인 일자리 사업' 여성 압지만…고임금 취업 연계는 넘성 쏠림 [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]	김난주 연구위원	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912699?ref=naver
		'연금제도 개선 · 여성 빈곤 대물림 막을 것' [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]		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912715?ref=naver
		가난한 노년, 더 궁핍한 여성 노인들 [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]		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912730?ref=naver